

韓國人の 傳統的 價値意識과 西歐民主主義

金 泰 吉

I. 民主主義의 基本特性

II. 民主主義에 適合한 心性

III. 韓國人の 傳統的 價値意識

IV. 價値意識의 變化와 韓國民主主義
의 可能性

I. 民主主義의 基本特性

‘민주주의’라는 말은 단순한 서술적 언어가 아니며 정의적 의미(情意的意味, emotive meaning)를 내포한 가치 언어(value term)인 까닭에,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가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기본 특성을 규정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박정희 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날조하였고, 전문적 학자로 자처하는 대학교수들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전통사상 속에 고유한 민주주의의 뿌리가 있다고 강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말한 ‘한국적 민주주의’가 학문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말의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러한 언어의 날조와 이에 영합한 사이비학설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민주화에 깊은 관심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다소간 의미가 있는 현상이었다고 여겨진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전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공산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자들도 자기네의 노선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코자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한국의 역대 정권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는 '국시'에 어긋나는 것으로 물리쳐 왔고,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비판적인 국민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태도를 같이 하는 경향이 현저하였다. 한국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길을 탐구하는 학자들은 사회주의 계열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장차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연구해야 할 날이 올 것으로 예견되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고찰을 '서구적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 국한하기로 한다.

'서구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반드시 그 의미가 하나로 통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서구적 민주주의의 뿌리를 멀리 아테네의 정치 사상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의 전통을 형성함에 기여한 여러 사상가들은 각각 서로 다른 이념을 '민주주의'의 개념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예컨대, 로크(J. Locke)가 주장한 민주주의와 루소(J.J. Rousseau)의 민주주의가 같은 것이 아니며, 노직(R. Nozick)의 민주주의와 로울즈(J. Rawls)의 민주주의 사이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에는 적어도 하나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démokratia*라는 희랍어에 어원을 가진 *democracy*, *démocratie*, 또는 *Demokratie* 등의 서구어의 의미의 풀이에서 명백하듯이, '민중(demor)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는 공통점이며, 통치의 주권이 민중에게 있다는 공통된 신념이다. 다만 '민중에 의한 통치'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의 대립이 생길 여지가 있고, '주권을 가진 민중'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까닭에, '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세부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일반적 합의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도대체 ‘민중(people)’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나에서부터 의견에 대립이 생길 수가 있다. 회람어의 demor 라는 말은 본래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나, 사실에 있어서 많은 노예들은 정치참여에서 제외되었다. 서구사회에서도 여자들에게는 참정권이 거부된 시기가 길었으며, 현대에 있어서도 투표권을 얻게 되는 성년(成年)의 기준은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정한 연령을 넘어서면 모든 성인은(범죄자나 정신병자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같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으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은 안정된 삶을 위하여 정부 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서구 민주주의의 통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적 결정과정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성원 모두가 공동 관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이다. 고대 회람의 도시국가에서는 그러한 직접적 참여를 통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현대에도 가정 또는 직장과 같은 소규모의 집단에 있어서는 직접적 참여 방식의 민주주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국가와 같이 규모가 방대한 집단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나라일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또 현대 국가의 입법이나 행정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대규모의 집단에 있어서의 민주적 참여는 각자의 권한을 대표에게 위임하는 대의제도(代議制度)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을 대의원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을 자신의 이익의 대변자로서 앞세워야 할 경우도 생긴다. 여기에 대의원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 민주주의의 어려움이 있거니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남게 된다.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는 것은 모

은 제도에 공통된 일반적 난점이다. 이 난점을 극복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것은 제도의 기본정신에 충실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지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와 관련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제도의 기본정신을 따라서 행동할 때, 그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이며,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의지의 수준을 따라서 같은 제도가 초래하는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구적 민주주의의 여러가지 제도가 그들 제도가 본래 목표로 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윤리적 심성(倫理的 心性)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은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가치관의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이념의 문제로 연결되는 물음이다.

II. 民主主義에 適合한 心性

서구의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들에게 침범을 허용치 않는 인권(human rights)이 있다고 믿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이 천부의 인권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각자의 몸과 마음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이다. 각자의 몸과 마음은 각자의 것이며, 본인 이외의 아무도 그것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나의 몸과 마음을 타인의 지배 아래 둘 수 없다는 이 기본권의 의식은 민주주의가 앞세우는 '자유'의 이념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를 기본전제로 삼는 점에 있어서 서구의 민주주의는 철저한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남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천부의 인권은 어떤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있다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자들의 신념이다. 천부의 인권의 명세(明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나, 기본적 인권에 관한 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명제가 말하듯이, 모든 인간을 기본권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의 하나이다.

모든 사람에게 천부의 권리가 있고 그 천부의 권리는 누구의 경우에도나 평등하게 옹호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인간 집단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제반 결정(決定)이 성원들의 이해(利害)와 직결되는 것이라면,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모든 성원들에게 고루 주어져야 할 것이다. 간접적으로나마 나라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도, 민주주의가 전제로 삼는 인권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일반 투표에 의한 선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의사(議事)의 결정, 지방자치제 등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성원이 이 제도에 참여하는 일 그 자체에도 다소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가지 민주주의 제도의 외형적 수립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하여 모든 성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옹호되는 일이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자아실현 내지 행복의 기쁨이 마련되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제도의 수립만으로 모든 성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그 제도가 표방하는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제도의 운영과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성원들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이상에 부합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성원들의 실천이 있기 위해서는 민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는 사회 성원 일반의 실천적 가치관이 민주주의에 적합한 심성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국가에 있어서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민이 그 이데올로기를 실천의 원리로 삼기에 적합한 가치관 내지 심성을 가져야 하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데올로기가 실천적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가치관 내지 심성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민주주의를 바람직한 실천의 원리로 삼기 위해서 요구되는 심성(心性)의 첫째는, 나와 남의 권익과 권익을 같은 비중으로 존중하는 공정심(fairness)이다. 민주주의는 본래 만인의 인권을 불가침의 것으로서 인정하는 개인적 권리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 개인적 권리의식은 우선 '나'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인적 자아의 욕구를 긍정하는 것이며,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당연한 태도로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개인들이 각각 자기의 권익에만 애착할 경우에 일어날 사회적 혼란과 이기주의의 역설적 결과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태도의 자제(自制)가 요청되며, 이 자제의 한계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과 권익을 같은 비중으로 존중하는 공정심(公正心)의 명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자들의 일반적 신념이다.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실천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심성의 둘째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을 이행하는 신의심(信義心)이다. 특히 직접 간접으로 받아들인 제반 규정(rules)을 지키는 넓은 의미의 준법정신은 민주주의가 성공적인 실천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심성의 하나이다. 민주주의의 여러가지 제도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시민들의 권익을 평등하게 수호하기 위한 규정 내지 약속의 체계라고 볼 수 있거니와, 이 규정 내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관제자들의 자율적 협조 없이는 그들 제도를 마련한 근본 의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실천의 원리가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세번째 심성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시적 안목과 삶의 공동 광장으로서의 사회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의식이다. 개인적 자아의식에서 출발한 서구의 민주주의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은 개인주의가 정도를 지나쳐서 이기주의로 흐르기 쉽다는 가능성이다. 어떠한 개인주의자들도 사회를 떠나서 단독으로 살 수는 없는 일이며, 삶의 터전으로서의 사회가 질서와 안정을 잃을 경우에는 아무도 개인적 삶의 설계를 성공으로 이끌

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주의자들의 집합일수록 도리어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며, 이 요청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타인들에 대한 개별적 배려를 넘어서서 집단을 집단으로서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들이 원자적 개별자로서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하나의 공동체를 구심점으로 삼고 '우리'의 의식이 강하게 발동할 때 비로소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호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나와 남의 인격과 권익을 같은 비중으로 존중하는 공정한 태도와 규범 내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신의심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과 사리(事理)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합리적 정신이다. 나 개인의 이익이나 눈앞의 결과에만 구애되지 않고 먼 곳과 먼 장래까지를 아울러 생각하는 거시적 안목도 넓은 의미의 합리적 정신 즉 지성(知性)의 바탕 없이는 체득하기 어렵다. 가족 또는 촌락과 같은 소규모의 집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은 혈연 또는 지연에서 생기는 정서의 유대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으나, 현대의 국가 또는 국제 사회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집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도 시야(視野) 안으로 포함시키는 합리적 정신의 밑받침이 있어야 한다. 결국, 사유와 행동에 있어서 사리(事理)를 제일의 원리로 삼는 합리적 태도는 민주주의가 실천적 적합성을 갖기 위하여 요구하는 기본적 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론의 여지 없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 만약 '합리적 정신'이 정확한 수학적 계산에서 발휘되는 바와 같은 논리적 사고의 능력만을 의미하고 인간적 정의(情意)의 요소는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합리적 정신만으로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의 권익이나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자 하는 쌀쌀한 논리의 소극적 태도만으로 사람다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인간사회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 의식도 원자적 개인들의 수리논리적 사고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우며, 따

뜻한 정(情)에 바탕한 인간애의 심성은 개인의 독립과 무관심이 강조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도 귀중한 인간심리이다.

Ⅲ. 韓國人의 傳統的 價値意識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의식은 주로 가족주의적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삼고 형성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가족 중심의 농경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의식 내지 사고방식을 주축으로 삼는다.

전통적 농경사회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혈연 또는 지연(地緣)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며, 서로 잘 아는 사이 또는 알 만한 사이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윤리는 서로 잘 아는 사람들 또는 알 만한 사람들 사이의 원만한 관계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요구되는 규범들을 주축으로 삼고 형성되게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행동 규범으로서의 한국의 전통윤리는, 가족윤리 중심의 규범 체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가족윤리란 혈연으로 이어진 가까운 사람들사이의 행동 규범이거니와,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가 가족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좁았던 우리 전통사회에 있어서 가족윤리 중심의 윤리사상이 형성된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고 할 것이다.

가족주의적 윤리의 기본적 특색의 하나는, 정과 사랑이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서의 구실을 한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거나 형성되어야 마땅한 혈육의 정 또는 가족애의 심리를 동원하는 그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내세우거나 경위를 밝혀가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전통사회에서 으뜸으로 숭상된 덕은 효(孝)와 충(忠)이었거니와, 효와 충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이해타산을 초월한 정리(情理)와 사랑의 심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윤리의식에 있어서 정서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한국의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인정이 두텁고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높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의 한국에도 남아있다. 특히 자기와 개인적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 대하여 두터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로서 칭송되었으며, '미풍양속'의 이름으로 숭상되는 풍속 내지 관습도 그 바탕에 깔린 것은 순후한 인정이며, 바로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인정이 두텁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칭송을 받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냉정하고 이지적인 사람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네것과 내것을 분명히 가리는 태도는 대체로 환영을 받기 어려웠으며, 법에 호소하여 시비를 따지는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개인주의적이요, 합리주의적인 심성이 강한 사람을 한국의 전통사회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며 형성된 우리나라 전통윤리의 둘째 특색은, 도덕체계 전체에 있어서 특정한 대인관계를 위한 규범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군신, 부자, 부부, 형제, 사제, 봉우 등 특정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며, 그러한 개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규범들이 도덕체계 전체의 근간을 이룬다. 윤리란 본래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의 처방이라 할 수 있거니와, 한국의 전통윤리에 있어서는 개인적 인간관계가 크게 중요시되는 동시에, 사람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예컨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특히 나와 가까운 혈연이나 지연의 관계가 있을 때는 그를 도와야 할 나의 의무는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또 친구를 속이는 잘못은 생면부지의 타관 사람을 속이는 잘못보다 크며, 부모를 속이는 잘못은 친구를 속이는 그것보다도 더욱 크다.

우리나라 전통윤리의 또 한 가지 특색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수직적 질서가 중요시된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의 수직적 질서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전통윤리에 있어서는,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와 개인들 상호간의 상대적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인 까닭에 모든 개인들은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가졌다는 생각보다는, 개개인이 차지하는 특수한 신분과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각자가 받아야 할 대우에도 차별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전통사회에 있어서 우세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국의 전통윤리가 신분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인의 자아의식은 개인주의적이기보다는 가족주의적이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인의 지배적 관심사는 '나'라는 개인의 이익 또는 성공이기보다는 강한 '우리' 의식으로 뭉쳐진 가족의 영광 내지 안녕이었다. 가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했던 것이며,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 내지 가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나의 가문을 아끼듯이 남의 가문도 한가지로 아끼는 공정한 정신은 비교적 약했으며, 국가와 같은 보다 큰 집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도 가족에 대한 그것을 따르지 못했다.

가족 또는 가문의 영광을 실현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는 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양반계급에만 주어짐으로써 기회 균등의 원칙이 거부된 가운데, 양반의 자제들은 국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빛내고자 하는 동기에서 관직을 탐내는 경향이 있었다. 일단 관직에 오르면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므로, 자연히 관존 민비의 관념이 일반화되었다.

과거를 보거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은 양반계급 가운데서도 남자

들에게만 인정되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는 과거와 관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포함한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친 일반적 현상이었다. 가계(家系)의 계승을 매우 중요시했던 가족주의 사회에 있어서 남성 자손에게만 가계 계승의 자격을 인정했으며, 학문 또는 예술의 세계에 있어서 타고난 소질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도 주로 남자들에게만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이름으로 여자는 남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요구되었고, 여자들 측에서도 이 남존여비의 윤리를 당연한 도피로서 받아들였다.

조선조 시대의 전통적 윤리와 사회제도가 8·15 당시까지 그대로 존속한 것은 물론 아니다. 19세기 말엽부터 이미 서양의 문물은 현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도 근대화를 향한 발걸음은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다. 19세기 중엽부터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걸쳐서 일어났던 변화 가운데서 민주주의의 수용을 위하여 가장 의의가 컸던 것은, 양반과 상민 또는 천민 등으로 나뉘어졌던 신분제도가 타파되었다는 사실과 일본 식민지 정책의 탄압 속에서 강한 민족의식이 보편화했다는 심리적 사실일 것이다.

제도의 벽을 쌓아 사람을 귀인과 천인으로 운명지우는 신분제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의 하나인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큰 장애의 일부가 제거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누구든지 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배울 수가 있었고, 옛날에는 양반과 중인들만이 독점했던 관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었다. 그러나 인간을 귀천으로 나누어 차별대우하는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돈 있는 지주에게 행랑살이를 하면서 천대를 감수한 계층이 남아있었고, 혼사에 있어서는 타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여전히 높았으며, 남존여비의 제도와 의식도 상당한 부분이 남아있었다.

일제가 가한 민족 전체에 대한 탄압이 강한 민족의식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도 민주국가의 형성을 위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였다. 민주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에 대한 폐쇄적 애착을 넘어서서 국가라는 보다 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거니와, 우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족의식이 국가의식으로 발전할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일제시대가 초래한 민족의식의 양양은 한국이 민주국가로 발전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이 바로 국가는 아닌 까닭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국가적 공동체의식으로 유도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은 까닭에, 우리들의 민족의식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위한 소지로서 남아있을 뿐이다.

Ⅳ. 價値意識의 變化와 韓國 民主主義의 可能性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미군이 진주한 38선 이남에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얻게 되고, 소련군이 진주한 이북에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제의 식민지를 벗어난 한반도에 있어서 새나라의 정치노선이 한국인들 자신의 주체적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지 못하고, 두 외국 세력의 타율적 영향력 아래서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 남한의 경우로 말한다면, 민주주의를 수용할 문화적 배경의 준비가 있어서 민주주의를 선택했다기 보다는, 미군이 진주했다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이룰때면 우연하게 민주주의의 길로 들어선 결과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수용 과정에 타율적 작용이 있었다함은, 외세의 강요에 못이겨 마지 못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 살았던 당시의 한국인으로서의 ‘자유’가 강조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이유가 있었으며,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었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와 환영

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다만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민주사회의 전설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민의식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정신적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이 선택 과정에 자생적(自生的) 요소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주의’는 해방 당시의 한국인들에게 대체로 환영을 받았다. 각자의 자유와 권익의 보장을 희망하는 소박한 심리가 아마 그 환영의 근거였을 것이며, 나 자신의 자유와 권익이 귀중하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익도 한결같이 귀중하다는 신념에서 민주주의를 환영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자유와 방종의 구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방종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막연하게 민주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권리의식을 품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으나,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 일반의 합리적 정신이 앞서야 하거니와,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감정의 영향이 우세한 한국인은 합리적 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주주의’와 만났다고 생각된다. 합리적 정신의 바탕이 부실했던 까닭에, 상대방의 시각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공정한 태도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권리에 따르는 의무의 무게를 인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공(公)과 사(私)를 구별하는 태도도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불가결한 심성이거니와, 오랜 가족주의의 전통 속에서 정에 치우치는 반면에 합리적 정신이 부족했던 우리 한국인은 공과 사를 구별함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의 인품이나 능력보다도 혈연 또는 동창 등의 사사로운 관계를 고려하여 투표하는 경향이나 취직

과 승진 등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연줄'이 작용하는 경향은 공사 혼동의 대표적 사례로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 가족주의적 공동체 의식은 크게 약화되었고 앞으로도 더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작은 집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약화가 곧바로 국가라는 큰 집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초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가족주의의 붕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일어난 것은 개인주의이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요구되는 시민적 공동체의식(市民的 共同體意識)은 아니었다.

우리 한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조국의식(祖國意識) 내지 민족의식이 강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민족의식의 바탕이 있었고, '애국'과 '애족'을 강조한 교육정책의 영향도 있어서, 한국인의 조국의식 내지 민족의식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조국의식 내지 민족의식도 일종의 공동체의식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은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민적 공동체의식과는 성질이 다르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시민적 공동체의식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되 나와 남의 권익을 같은 값으로 존중하는 공정성 내지 합리적 정신과의 결합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한국인의 조국의식 내지 민족의식은, 합리적 정신보다는 원초적 정서의 비중이 크며 시민적이기보다는 집단적이라는 점에서, 저 민주시민의 공통체의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기본전제는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다는 믿음이지니와, 관준민비의 관념의 뿌리가 깊은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이 믿음이 투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조선조 시대에는 국토와 국민이 모두 왕의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하였고, 일제의 식민지 교육도 왕권(王權)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기되고 교과서에도 더러 써어졌으나, 국민 일반이 주권의식을 갖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정자와 공무원들이 국민을 주인으로서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 일인데, 해방 이

후에 역대정권은 지배자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였고, 각급 공무원들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 자기네의 본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위정자와 공무원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무의식적 착각은 그들 자신에게도 있었고, 국민 일반에게도 있었다.

힘의 정치에 눌려서 주인의식이 약하고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시민의식도 약한 까닭에, 우리 한국인에게서는 자율적으로 규정(rule)을 지키는 습성이 약하다. 처벌의 위협을 느낄 경우에만 법을 지킬 정도의 준법정신으로는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거니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규칙을 우리가 자진하여 지킨다는 자율적 자기 제어력이 약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한국인의 생활태도에 민주시민으로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직적 질서(垂直的 秩序)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전통윤리도 민주주의 수용을 위해서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개인들을 동등한 권리의 소유자로 보고 한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신조이거니와, 한국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념이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평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지장이 되곤 한다. 예컨대, '윗사람' 앞에서는 말을 삼가야 한다는 관념이 대화자들의 일부에게 남아있을 경우에는 자유로운 언로(言路)에 지장이 생기게 되어 민주주의적 합의에 이르기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낮추어 보는 남존여비의 관념의 잔재도 가정 내지 직장의 민주화에 저해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이상에 열거한 바와 같은 전통 속의 비민주적 요소들은 모두가 한국인의 의식(意識)에 달린 문제들이며, 의식이라는 것은 객관적 생활 여건의 변화를 따라서도 변하고 우리들 자신의 반성적 노력을 통해서도 변하는 것이므로, 그것들이 한국의 민주사회 건설을 방해하는 절대적 조건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해방 이후 40여 년 동안에 우리들의 의식구조는 상

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민주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결의만 확고하고 제도와 의식의 개혁에 모두가 동참한다면 서구의 선진국들보다 더욱 바람직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합리적 정신의 부족 또는 공사(公私) 혼동의 폐단도 조금씩 시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 일반의 주권의식이나 남녀를 동등하게 보는 관념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된다. 강자의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의 평등(平等)에 대한 관념은 아직도 부족한 편이나, 약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옛날의 자기 비하(自己卑下)의 태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규정을 지키는 습관이 몸에 배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해방 직후에서 6·25 전후에 겪었던 방종과 무질서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자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집단심리(集團心理)의 비중이 큰 한국인의 민족의식 내지 조국의식은 지성적 반성의 매개를 거친 민주적 시민의식과는 구별되는 것이나, 그것도 일종의 공동체의식임에는 다를 바가 없으며, 저 정서적 집단의식을 현대의 민주국가가 요구하는 시민적 공동체의식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이 '같은 인간들의 집단인 까닭에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회라는 집단을 아끼고 지켜야 할 이유로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하나는 사회 전체의 질서와 번영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는 계산상의 이유요, 또 하나는 사회의 모든 성원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는 동질의 존재라는 인식이 불러일으키는 동족애 내지 인간애의 감정이다. 혈연 또는 지연에 얽힌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풍부한 한국인의 온후한 인정을 보다 보편적인 인간애의 감정으로 승화시키는 동시에, 나와 남의 권익을 공정하게 옹호하고자 하는

합리적 정신과의 결합을 통하여, 인정과 지성이 조화를 이룬 공동체의식을 갖는 일이 우리 한국인에게 불가능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다. 역사와 전통이 오랜 한국인의 의식세계는 그 내용이 풍부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다만 우리들의 전통문화와 전통의식이 옛 모습 그대로 서는 민주주의 실현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를 적지 않게 가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전통적 의식구조를 현대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한국이 처해 있는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들의 당면한 과제가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의식구조 내지 사고방식을 이 목표에 맞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을 고치는 문제는 모든 국민의 협력을 요구하는 자기교육(自己教育)의 문제라 하겠으나, 이 자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의 하나는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민주국가의 건설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결의를 갖는 일이다.